제345회국회 (임시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8월18일(목)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가. 고용노동부
2.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가. 교육부

상정된 안건

1.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 2
   가. 고용노동부
2.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 2
   가. 교육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344회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본인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증가하는 청년실업률 등 청년 일자리 불안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관해서 정부 측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와 함께 대안 제시 등 해결 방안에 관한 좋은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절감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온 사교육비는 연간 약 33조로서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뿌리 깊은 학벌과 학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채용에 있어 출신 학교를 차별화하는 기업들로 인해서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아이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숨 막히는 입시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나섰지만 일자리가 없어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0.3%를 기록하고 전체 대졸자의 10.4%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으로 취직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질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졸 청년 10명 중 6명이 1300만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일리를 구하지 못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고 흙수저, 금수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외치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돼서 사회 진입이 지연되고 청년들은 3포 세대, 4포 세대, N포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여섯 차례나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고 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

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대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께서 정부의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고를 듣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회의에서 인사하지 못한 위원님이 계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민 민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청년실업 아주 매우 심각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생특위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또 김성찬·윤관석 양당 간사님 모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민생특위를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1.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가. 고용노동부
2.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가. 교육부

(10시09분)

○위원장 김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대책에 관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무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다음 교육부로부터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리고 각 부처 관계 실·국장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정부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범부처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하에서 모든 정책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시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부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위해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이 모아져서 최근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 7월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만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 경제가 고성장 시기를 지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된 것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해지고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 인해 기업의 정규직 직접채용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 애로는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일자리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가며, 창출된 일자리가 실제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등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 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간 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로 공유되는 협력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지원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업장 감독 및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고용질서를 확립함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민간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워크넷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중견기업 일자리 정보를 스토리텔링 형태로 소개하는 등 청년들이 워크넷을 평생 직업생활의 친구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입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를 가더라도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사업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정부 예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재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면접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민관 합동의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청년들에 대하여 기존의 정부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틈새를 보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 구조적으로도 향후 몇 년 간이 소위 청년 고용절벽이라고 불리는 가장 심각한 청년 취업난의 시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입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고용정책실장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대책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 여건, 기본 방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 여건입니다.

최근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한 9%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고용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된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하에서 성장과 고용 간의 연계가 약화되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따라서 정규직 직접채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그리고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하고 고학력자 중심의 인력 공급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공급·수요 간 미스매치 등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채용 시에 재정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청년들이 체감할 정도로 일자리 사정이 양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는 청년고용정책 기본 방향으로서 민간의 채용 여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제도·관행 정착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간 격차 해소와 기업 간 상생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로 개선하며 적재적소에 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하에서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시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현재 57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2조 1000억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에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 중인 청년고용촉진대책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청년 지원 프로그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 수혜 대상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고용정책개발전문위원회와 현장모니터링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을 발족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청년고용정책협의회를 개최토록 해서 중앙·지방 간의 협업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신설해서 추진함으로써 유사·중복 사례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부문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청년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0%에 그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여력 확충을 위해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제도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청년고용증대세제 그리고 청년 채용 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능력 중심 인사관리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로 격차 완화와 상생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이후에 2년 간 근무하는 경우에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금년 7월부터 1만 명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과 확산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위 10%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기업을 통해서 협력업체 처우 개선에 활용토록 하는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지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일경험 수련생을 위한 표준협약서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워크넷에 정부·지차체와 청년일자리사업을 연계시켜서 온라인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상에서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각 체계를 구축해서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취업과 창업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사업을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패키지사업 중에서 취성패 2단계하고 중앙·지차체가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서 취·창업 제도를 개선하고 계속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3단계 취업알선 단계에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면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청년희망재단을 통해서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을 위해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문계 특화 과정을 강화해서 전공 외 분야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 중심의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올 7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경우는 작년 5000개에서 금년 7만 7000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재학생 단계로 확산을 실시하면서 기업 현장교사 양성교육과 훈련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CS의 경우는 847개가 이미 개발된 형태고 지난 7월에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과 직업훈련, 자격 체계를 개편해 나가면서 NCS 보완과 추가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분야별 일자리 발굴과 취업연계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채용행사를 추진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통해서 청년 채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의 경우는 취업연수사업인 K-Move 스쿨 질 개선을 위하여 우수과정 중심으로 개편을 함으로써 취업률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월드잡 등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는 해외취업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함으로써 청년이 스스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관련 법령과 예산입니다.

현재 청년고용특별법 개정 9건과 청년기본법 제정 1건 등 10건이 발의된 상태고 예산은 57개 사업에 2조 10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김상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 중 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24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 관련 사교육이 점수와 성적 향상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나 저출산 등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지혜,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성적과 단편적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으면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해 초·

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노하우를 초·중등 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토크콘서트, 학부모 포럼 등 현장소통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공교육의 변화를 인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학교 내에서와 입시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행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의 테두리 안으로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정상적 학원 운영 근절, 과도한 교습비 규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및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등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거듭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들이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신익현 학교정책관입니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및 국가장학금 도입 등 교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 결과 가계소비 중 전체 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교육서비스의 영향력도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 발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24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별로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 수요가 기존 교과 중심에서 예체능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와 관련해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와 대학별 전형계획에 대한 사전예고제, 대입전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대입 진학 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도부터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과도한 영어 사교육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모든 평가 및 입시에서 선행출제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크콘서트·포럼 등 학부모와의 소통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 변화를 알리고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관련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가정에서와 같이 세심하게 보살피고 3~6학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돌봄으로 전 학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2020년까지 참여 학생을 총 26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체

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에서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술·체육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개별지도가 필요한 소인수 강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역별 예체능 특목고 및 중점학교 등에서 타교생 대상 방과후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예체능 등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학원의 과도한 교습비 인상 억제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근절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대광고 및 불안마케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의 부당 징수 및 편법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로 학원비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능력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우선 괜찮은 고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도제학교 등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매년 상승 중인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2017년에는 5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60개교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 203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직업계교 진학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도 협력하여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참석한 모든 위원님들이 한 차례 질의할 수 있도록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분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완수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박완수 위원 장관님, 여러 가지 시책, 아이디어 발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감사합니다.

○박완수 위원 우리 국민들 중에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복지정책들이 그동안에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하고 또 자치단체들이 임의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국민들이 받는 수혜 혜택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그런 종류의 일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8월 6일날 장관님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첫째는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 정부의 시책과 중복이 되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연계가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어떤 청년 취업을 유도할 수 없는 시책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가 자치단체가 어떤 시책과 복지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부

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전 정부적인 종합적인 복지 시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효율적인 복지 시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장관님께서 앞으로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임의로 내놓는 이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정책이 정치권 따로 자치단체 따로 정부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청년들 입장에서 융합된 서비스, 좀 더 촘촘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우리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도 제가 가장 크게 우려를 했던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자리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인 일자리 지원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의 경우 청년수당의 경우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자체가 빠져 있다, 핵심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것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점심도 먹어야 하고 차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주는 건데 메인이 빠진 상태의 현금 지원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런 것을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시한테 그것 따로 따로 할 게 아니고 서울시와 우리 고용부가 함께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광역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열어서 거기에 들어온 청년들,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까지 끌어들여서 융합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박완수 위원 제가 볼 때 어제 서울시장께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박완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생각할 때 이 고용노동부가 단편적인 시책, 참 고육지책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은 청년수당과 이런 어떤 단편적인 시책보다도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단편적인 시책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는데 제조업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다양한,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든지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으로 산업정책이 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산업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들을 고도 성장기에 맞는 정책들을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노동개혁이나 금융개혁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히 노동개혁 문제가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는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취업을 시키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미스매치 문제, 이 네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산업정책의 어떤 조정,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 문제하고, 두 번째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 문제, 외국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우리 청년들의 고용 창출 문제, 네 번째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 이 네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네 가지 중에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해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 개편이랄지 이런 부분은 범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고요. 또 노동개혁 문제도 사실은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통해서 똑같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더더욱이 저희 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해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문제도 저희들이 현장 노동개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희 30초만 쓰십시오. 이미 30초 쓰셨습니다.

○박완수 위원 30초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교육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돌봄 서비스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할 때 당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예체능 부분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 예체능에 대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만 가지고 한다면 전문인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한 학교만 할 게 아니고 지역별로 모아서 전문인력을 사교육기관에서 받아서 협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창원에서 제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은 사교육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장소는 교육기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학부모들의 당초 사교육의 목적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주로 특기적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이라는 것은 음악·미술·체육·컴퓨터 그다음에 독서 관련된 것인데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73%의 프로그램이 그런 특기적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초·중등 전부 합쳐서는 한 46%가 그런 예체능 계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들이 단위학교별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역별로 중점 거점학교 그다음에 예체능 특목고 등에서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좀 더 예체능 프로그램이 확대가 돼서 사교육 경감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사교육 담당기관하고 좀 협조를 하세요.

……

○위원장 김상희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서울 금천의 이훈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석상에 자주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고 국민 전체한테 고통 분담을 호소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 재정을 다 투입해서 은행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체감적으로는 지금보다 훨

씬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실업 상태가 벌어졌으니까. 그때 기업을 살려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고통을 감내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 기재부장관,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이 우리 기업 살리고 은행 살리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고통 감내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한마디 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은 다른 사람 빠지더라도 노동부장관만큼은 노동자 편에 서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잡는다고.

그런데 오늘 발표하시거나 지금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다 '예, 동의합니다' 얘기하는데 노동자들의 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을 편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소위 얘기해 가지고 전경련에서 노동의 유연성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 역시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그런 태도로 노동부장관으로서 재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그 일자리가 도대체 어떤 일자리겠습니까? 그 일자리가, 장관님 같으면 그 일자리 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으시겠어요? 양적인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냐, 하나라도 더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 영혼 없이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노동부 보고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일자리정책 잘 하고 계십니까?' 하면 다 보고합니다. 아이템, 어젠다 다 있고 이슈 있고 거기 얼마 썼고 다 보고하는데 도대체 이 정책이 제대로 다 효과가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헬 조선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헬 조선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 써도 우리 청년들 지금도 죽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없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노동부가 산업부, 전경련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개혁에 있어서도 산업부나 또는 경제단체에서는 소위 법으로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오히려 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해서 저희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발전이나 규제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훈 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청년 일자리 의무고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책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것이 청년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추가 고용의무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사실상 할 수 있는 데는 의무고용 하자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 부문에 의무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청년을 채용……

○이훈 위원 제가 어려운 업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고용노동부에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업종별로 업태별로 회사별로 기업별로 보면 영업손실이 많은 회사들도 있고 3년간 영업손실이 계속 있는 회사들도 있고 사실은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도 있고 다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려운 회사들을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이 실현하기가, 취지는 공감을 하나 법으로써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공공부문에 청

년고용의무제를 도입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는데 다섯 분이 소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고 네 분이 위헌 소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일정한 역할이 계속 주어져 있기 때문에라도 그런데 민간부문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선제적으로 한 벨기에 로제타 플랜(Rosetta plan)도 결국에 민간영역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판결이 되어서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격차 해소랄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청년고용을 높여 가는 게 옳다라고 보고, 그래서 노동개혁과 격차 해소 쪽에 저희들이 방향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다 좀 디테일하게 사실은 한번 정부 측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저희가 필요하면 방에 가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교육부장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방과후 프로그램도 얘기하시고, 특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일부 그런 언론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학원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사교육 열기가 가라앉을까 봐 그런 불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는 게 결국 이게 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특목고 제도 그다음에 결국 대입 입시, 대학입학제도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게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를 뽑는 것에서의 그 입시정책, 대학에서의 입시정책이라는 것이 사교육 시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끊임없이 사교육 시장을 창출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갖고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도 하고 뭣도 하고 이거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것을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정부정책의 의도가 처음부터 사교육 시장을 확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디자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 보다 더 고려해야 될 점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현재 입시제도나 고등학교 입시제도나 대입시제도에 관해서 봤을 때,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공교육 강화라고 했던 부분들, 이것이 단 한 번도 우리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교육을 자꾸 부추겨 왔다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새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처음에 의도한 디자인대로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지 한 번쯤 제대로 확인할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목고, 자사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들에 대해서 입시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자사고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학기제가 학교의 학습교실 수업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에서의 입시도 점진적으로 교과성적 위주에서부터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활동 위주로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교육부장관님 뵐 기회가 없어서 20초만…… 잠깐 하나

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약간, 10초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가습기국조특위 중이라서요. 제가 10초만 좀 쓸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10초만 쓰세요, 10초만. 12시 20분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훈 위원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느냐 하면, 서영고라고 아시지요, 서울 영재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이훈 위원 사실상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 톱입니다. 상위 영점몇 %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훈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강남 학원가에 가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주말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입시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톱, 0.1%에 드는 아이들도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대입 입시제도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새누리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훈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질문을 교육부총리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입 목적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사교육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제일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가 제일 높고,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학생들의 성적과 단편적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으면서 미래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입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승희 위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방금 전에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도입할 때 외국의 모델을 참조했다 그랬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췄고 핀란드는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는데, 어디에 맞춘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핀란드 쪽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만약에 핀란드의 진로교육이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실질적으로 이런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교과활동보다는 비교과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학교부터 실시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저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면 정말 지금 시험 위주의 우리의 교육제도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적과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학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그냥 한 학기 놀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 그리고 취지, 목적 이런 것을 학부모들한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이런 것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사교육과 관련된 교육기업에 대한 주가를 보면 최근에 능률교육이나 비상교육, 상장사들이 15개가 있는데 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이 결과를 해석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동안 한 학기가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을 계속적으로 200~300명 정도씩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00~7000명의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해 왔고, 대화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개념을 좀 더 다른 학기로 확대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90% 이상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기본취지는 진로학습이 기본적인 목표지만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미 일반 교과수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학생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 보면 '사교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학원에 안 보내겠다'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또 저희가 맞춤형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서 진행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사교육 경감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능력을 높이고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경감 효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지역 간 인프라 차이에 의해서 어떤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고 농촌이나 또는 벽지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나 농산어촌에는 사실상 체험학습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로체험학습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어떤 실습 기자재 같은 것을 버스에 싣고 지역의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진로체험학습을 하게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100여 개가 넘는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그 대학에서 방학기간 동안 도서·벽지 학생들을 1박 2일 동안 기숙사에 오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체험학습에 그런 불균형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보다도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웹사이트에 올려서 중학교에서 그러한 진로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지금 현재 2학기에 거의 모든 학교에 실시되기 때문에 2학기에 실시되는 학교들이 2학기 전체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처를,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로학습처를 발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사회부총리님, 입시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전재수 위원 지금 서울강남교육청이 제시한 시간당 교습비를 보니까 이게 한 3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분당 5000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습과정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8배이고 단과과정의 4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니까 65% 이상이 시간당 교습비를 30만 원을 초과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시간당 무려 66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진학 정보에 대한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또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진학 정보에 대한 격차가 바로 입시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차원에서 진로진

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전재수 위원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전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웹사이트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담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전문 컨설팅센터를 통해서……

○전재수 위원 전문가들인가요, 전문가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전재수 위원 일선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해 봤거나 아니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전재수 위원 그러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이 기능을 하시는 분들, 교육부 공무원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입상담교사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에 뭘 하셨던 분들인지 또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현직교사들 중에서 대학입시에 주로 관여했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기능을 부총리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진학 정보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줄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기능을 한번 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채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확인을 해서 그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2018년도부터 영어 절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거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입 입시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여론 수렴을 통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게 풍선효과가 되어 가지고 대학이 또 다른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또 꿈틀꿈틀 하거든요. 이 부분도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생길 겁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부총리께서 좀 각별히 챙겨 봐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전재수 위원 2016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청년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통계수치이고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청년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체감 실업률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지금 범정부적 차원에서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조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대략적으로 카테고리를 한 5개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더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전재수 위원 그것도 한번 평가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전재수 위원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충분하지 않지만 계속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면 뭐 합니까?

전체 노동자의 14.6%, 280만 명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313만 명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이 부분을 근

로감독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처벌기준을 강화하시든지, 그렇다 그래서 처벌이 능사는 아닐 텐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이거 아마 노동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강조하신 대로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한테는 그게 직업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계약 이 부분을 담은 3대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작년 상반기에 이어서 적발률도 높이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민간기관들과 합동으로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키자는 캠페인도 하고,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새누리당의 김현아입니다.

저는 교육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현아 위원 2018년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변경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이유는 영어교육을 가지고 성적순으로 대학입시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서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두 번째 목적인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수능 언어영역 그러니까 영어영역의 절대평가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게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국어 특히 수학과외나 수학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다른 과목으로 사교육비가 이전하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현아 위원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그것으로 인한 풍선효과 부분도 분명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또 하나는 절대평가로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각 대학에서는 논술이나 면접 이러한 별도의 영어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나 아니면 교육부 안에서의 의견은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논술, 면접에서 영어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영어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영어가 필요한 부분의 것들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냐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직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2018년에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 부쩍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현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대학전형을 보면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지금 한 7 대 3 정도로 수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또 최근에 보니까 수시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일명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율이 지금 한 29.5% 정도로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학종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서 혹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 입장은 그동안에 입시가 지나치게 교과 성적 위주의 서열화를 통해서 입시전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학종을 통해서 교과 성적 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양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학종을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지 학종을 시행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학교에서의 활동 위주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스펙 위주의 사교육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시스템을 일선 교사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도 똑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 입장에서 비교과활동이 확대되는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사교육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교육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정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집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맞벌이부부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에서 굉장히 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육을 확산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큰 정책목표하에 교육정책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가정에서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천천히 할 수 있는 사교육시스템 또 하나는 학교별로 학교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교육부 방침이 내려가면 지역별로 거의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취지를 끌고 나가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조급하게……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천천히 가는 것에 교육부가 아주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종에 대해서도 앞으로 너무 증가하는 것만이 꼭 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용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김현아 위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현아 위원 이게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는 물론 첫해이기 때문에 별로 실적이 많이 있을 것은 아니지만 지급된 실적을 보니까 13건에 한 2500만 원에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0.2%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대략 목표치를 1만 명 정도 설정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금년에 작년보다는 신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채용을 한 뒤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예산 지원까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대한 1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승인인원이 6171명입니다. 최대한 1만 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용이라는 것이 이 지원금만 가지고 하지 않고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모든 예산과 접목된 사업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이 잘릴까봐 목표치를 많이 잡아두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안 되는 원인을 명확히 찾고 준비하시는 게 더 우선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구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2.6배나 높고 고용률은 또 43.6%로 17.6%나 낮습니다. 문제는 또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34% 약 4배 가까이에 달한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3명 중 1명이 실제로 청년실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지요. 그래서 헬조선 얘기가 나오고 N포세대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취업난은 거의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권 장관님께서도 보고과정에서 청년고용 절벽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살 만합니까,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심각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가장 어려운 계층이고 힘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비해서, 밑에서 그런 것인지, 정책은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과연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것인지,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절망적인 외침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발언도 있었고 해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제대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께서만 절감한다, 심각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난적 수준으로 대통령부터 장관 그다음에 모든 공직자들이, 전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게 해야 되는데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윤관석 위원 국무회의 같은 데서 심각하게 발언 좀 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다양하게 또 대면보고 드릴 때 보면 하루도 빼지 않고 고민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청년고용 문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다르게 나와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더 절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구직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것 보면 청년들 구직실패 이유가 고용시장 불안, 잘못된 고용정책 이렇게 나오는 게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임금과 소득 불평등 해소, 기업이익에 치중한 정책 개선 이것도 한 60% 중반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청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는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고, 두 번째 기업 눈치 보지 말고, 세 번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시장을 안정시켜 달라 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고용할당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현재 3%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을 5%까지 확대하자, 이것은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많은 법안들이 현재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저는 그래서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실제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고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최소 3%까지 의무고용을 도입하면, 의무고용 할당제를 확대하면 전체 21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런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랄지 노동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완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윤관석 위원 예, 장관님 그것은 아까 보고 때 제가 정책자료들도 봤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공부문의……

○윤관석 위원 그런 것도 추진하시고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할당률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고용규모별로 확대하는 부분이 확실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지금 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기권 노동부장관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공부문의 확대 문제는 다른 노동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간부문의 확대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실패를 했고 똑같은 업종이지만 어느 기업은 올해 문을 닫아야 되고 어느 기업은 확대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윤관석 위원 다른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토론을 같이 하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따로 만나서 보고 좀 주시고,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할당을 높이는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부분들, 이것은 정부 측 국책기관의 조사에도 보면 2015년 노동부 조사에도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에도 주당 52시간 총량규제 시 14만~15만 명 고용창출이 된다 이런 보고가 있고 또 15년 9월에 한국노동연구원, 이곳도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했을 때 15만 개에서 27만 개까지 일자리 창출이 확대 가능하다. 이 부분도 과감하게 실현하는 게 저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100% 공감하고요.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이 단계적으로 노사정 간에 4단계를 통해서 단축하는 효과도 있지만, 52로 줄어들지만, 또 현재 44시간 정도 하고 있는 기존의 일하는 분들도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효과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업에서 유연화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사전협의제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성과 연계 강화에서. 사전협의제로 해서 각 부처에서 일자리사업 신설·변경 시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해서 신설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것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로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윤관석 위원 중복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알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정확하게 검토를 하려고……

○윤관석 위원 이 부분이 혹여라도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서울시 청년수당제는 적극적 구직활동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더 훨씬 구체적으로 지원자 선정에 있어서 지원동기나 활동목표, 활동계획들을 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구체적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서 중앙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하면 불륜이고 중앙정부가 하면 로맨스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권 장관님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청년 개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을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에 애로를 지원하는 게 청년에 대한 기본 서비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뭘 할 거냐의 계획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지,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각 청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개별의 2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가자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양쪽을 비교해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청년을 채용했을 때 채용장려금을 주는 문제랄지 이런 전체를 연결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더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장관님, 몇 분들이 질의를 해서 제가 조금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구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장관님께서는 보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정부라 함은 여기서 중앙·자치단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정부가 취업 지원, 직업훈련, 적극적 고용조치를 하고 그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희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서비스에 참여하고……

○위원장 김상희 취업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그럼 그게 정부 정책이고, 서울시는 지금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거지요? 그 차이지, 구직을 한쪽은 전제로 하고 한쪽은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국가가 지원하는……

○위원장 김상희 예, 그렇게 보면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국가가 가장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유럽에서의 많은 실패 경험을 토대로 EU의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랄지 OECD의 권고랄지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만들었고 그 부분이 우리 청년들의 대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국가의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전체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에서의 그런 실패 사례들 때문에 우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관련 자료를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진짜 국정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제가 지금 가습기특위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되는데도 장관님들 오셨다고 그래서 질문은 꼭 드려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해서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가습기특위하고 좀 중복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 해 가지고 2015년 5월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그에 따라서 313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2015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실적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2016년 7월 말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확정 313개 기관별 신규채용 목표치 대비 채용 실적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각 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또 신규채용에 대해서 들어간 인건비 부담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면 정부가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8000여 명 추가로 늘려 신규일자리 8000여 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되는 8000여 명의 고령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더라도 청년 채용규모는 예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획재정부 고시를 보면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하며, 국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만 정원 확대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원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정원을 8000명 늘리는 것하고 기획재정부 지침하고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다 지침은 나가 있고요.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원 원칙하에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임금피크제 실시하면서 금년에 약 4400명, 내년에 4000명 해서 8000명의 정원을 늘리면서 그 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인원 8000명이 느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 늘려도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관별로 필요 업무는 다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기관별로 협의를 해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4300명이고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은 2200명 정도 됩니다.

○정유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됐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금년부터 전면 확대돼서 3200개 전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또 학원가에서 자유학기제를 마케팅 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선행학습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또 서로 불안하잖아요, 어떤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가지고 그런 마케팅이 불고 있단 말이지요, 학원가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문제는 학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의 지식 주입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사회 변화에 대한, 그런 교육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 참여율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사교육 참여율이 75%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69%로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사교육 하면,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 동안을 오후에 교과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마치 노는 게 아닌가 해서 학력 저하를 또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교에 가서 실제로 보면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자가 굉장히 줄고 학력 우수자들이 더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업이 주입식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업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인식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면 조금씩 사교육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교실의 변화가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고 또 대학 입시전형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유섭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희 예, 1분만 드리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지금 사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거의 보니까 초등학교는 99.9%, 중학교가 99.7%, 고등학교 99.8%가 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최저가 입찰 방식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유섭 위원 최저가 입찰 방식인데도 부산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담합 유착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싼 인건비의 교사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성 사업으로 접근하는, 민간 사기업이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방과후학교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운영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관리비 6%, 운영비

10% 이런 것을 빼고는 모두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가 낙찰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대비해서 개선을 해서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결국 인건비 하락한다는 것은 질이 나빠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저도 대법관 청문회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존경하는 이기권 장관님 보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기구 위원 잘 계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어기구 위원 청년실업 문제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죽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렵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우리 청년고용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도 답답해서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의 변화 수와 우리 청년들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우리 노동시장 내의 구직자 내지는 일하고 있는 분들을 분석해 봤더니, 다른 변수는 다 통제를 하고 전문대졸 이상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일자리 중에 동일 업종의 평균임금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를 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IMF 터지기 직전 97년도에는 양질의 일자리 수는 530만 개,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거나 찾고 있는 전문대졸 이상은 495만 해서 약 30만 개 정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5년이 흐른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약 580만 개 정도로밖에 늘지 않았는데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거나 찾고 있는 청년들의 수는 1050만 명, 400만 개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또 우리 성장률이 과거에 10%에 있다가 3%로 내려오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복합되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미스매칭도 심각한 것 같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돈을 아무리 갖다 여기에 투자해도 아웃풋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던 일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어기구 위원 이제 입맛에 맞는 일자리도 자꾸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또 청년들은 고용지원센터에 가지도 않아요, 고용서비스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공무원시험 보면 수만 명씩 몰리고 이래서 노동시장 진입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 청년 근로자들이, 청년 실업자들이 진입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잘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어기구 위원 1년 이상 버티고 있는…… 이런 게 통계가 좀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있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우리 청년들, 특히 중소기업에 간 청년들의 경우에는 처음 취업해서 평균 1년 6개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의 한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야 되는데 여기 일자리들이 허드렛일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런 일자리 질의 문제가 있어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관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일자리를.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만들기만 바라고 있으면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공공섹터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아마 이용득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할당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3%인데 이걸 5%로 올린다든지 그래서 일단 공공섹터에서, 왜냐하면 시장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공이라도 좀 모범을 보이면 민간섹터가 쫓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공공에서, 물론 이게 국가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렵지만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기업들이. 그러면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누구겠습니까? 재벌들 아니겠어요? 대기업들, 30대 재벌들. 30대 재벌들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이 지금 700조라고 우리가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채용 규모 데이터를 보면 2014년에 10%, 2015년에는 6.3%로 떨어져요. 대기업 쪽에서도 고용을 않고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 가지고 이걸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러면 이게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사내유보금 많이 쌓아 놓고 있는 재벌들한테 강력한…… 좀 데려다가, 서별관회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재벌들 불러다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처럼 '니들 한 5% 해라, 당신들 말이지' 이렇게 좀, 지금 독재시대는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이 3% 청년고용할당제만 지켜도 한 7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또 30대 재벌들이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만 해도 한 2만 개 일자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업의 사내유보금 1%를 출연해서 청년고용기금을 조성하면 23만 개 일자리, 총 한 32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죽 옛날에 했던 것 나열하지 말고 한번 강압적으로,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 가지고 공권력을 좀 이런 데 써 가지고 우리 청년의 실업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이 분야에 오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에 앞장서 줘야 된다는 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사실 정원을 늘리는 문제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한 사람 임금피크제 했을 때 1년 치 청년 임금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원을 늘려서 나머지 30년 공공부문에서 일한다면 29년 치를 정부가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2년간에 걸쳐서 약 8000개 하고 또 지방 공기업도 4000을 추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부문을 더 추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민간부문 문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저해 요인을 해소해 주는 것이 1번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규제 완화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하도급 주지 말고 직접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똑같은 10억을 투자하더라도 이제까지 6명의 일자리를 늘렸다라면 10명, 12명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다 해서 거기에 저희들의 노동교육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격차,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청년 문제가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의 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기구 위원 끝난 거예요?

○위원장 김상희 예, 추가질의,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썼기 때문에요.

○어기구 위원 예.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석을 해서 죄송한데 저도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석을 자꾸 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7월 청년실업률이 9.2%이고 올해 1분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2030 청년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2만 624명 중 7772명으로 49%를 차지합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하신 사교육비 절감 관련 업무 보고를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있는데 대학생들, 2030 청년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학생이나 2030 청년들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동안에 통계청하고 교육부가 같이 사교육비 조사를 해 왔는데 그것은 초·중·고 학생 통계 조사이고 성인 대상 조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가구동향 조사의 일부는 성인 학원비 조사도 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즉 취업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취업 사교육비 문제가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대책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2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취업 사교육 경험 및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라고 했을 때 1인당 사교육비가 평균 233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거든요. 실은 많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병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공부를 하면서 그 취업 사교육비를 전액 스스로 감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혹은 부모님에게 일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이게 가계 부채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취업 사교육을 받은 과목을 살펴보면 어학 성적 취득을 위한 사교육이 33.1%, 자기소개서 첨삭 등 취업 컨설팅 비용 32.6%가 주를 이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취업을 할 때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현장실습을 통한 인턴제를 학교 차원에서 운영해서 질 좋은 어떤, 학교 외에 인턴활동을 할 수 있게 주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문학교 같으면 NCS 기반의 교과과정을 노동부하고 같이 개발해서 현장실습 차원에서 산학 일체형 교육을 통해서……

○신보라 위원 그건 일·학습 병행과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취업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업을 잘 유도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취업 사교육비가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관련한 조사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졸업유예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현상은 잘 아실 텐데요. 이것도 결국 청년취업의 입직으로의 이행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발견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매 학기 대학에 납부하는 졸업유예 비용이 취업준비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대학생의 졸업유예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당하신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요새는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오히려 적고 5년, 6년씩 학교에 남아 있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스펙 쌓기가 필요 없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대표들과 만나서도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기업에 계시는 인사 담당 분들은 또 영어라든지 이런 스펙을 자기네들은 보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다

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협동능력 이런 걸 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대학에서 기업에서의 실상을 좀 더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 더 확대해 나가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의 그러한 사교육비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예, 그러세요.

○신보라 위원 교육부에서 졸업유예 실태조사를 하시지요? 제가 작년 한 5월쯤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 조사 결과를 한번 열람해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 2016년에 2015년도 졸업유예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2015년도 5월에 발표한 2014년도 졸업유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2개 대학 중에 그 답변에 응한 138개 대학 자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졸업유예 비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것,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굉장히 천차만별로 졸업유예 비용을 부과하고 있었고 또 그 졸업유예생들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면서 졸업유예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취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 연계가 가능한 강의를 수강토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지원은 전혀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유예 비용 부담의 어떤 활용도와 만족도 그리고 천차만별인 유예제도 등을 이제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조사도 전수조사화하고 이 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고용노동부와…… 이게 취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새로 대학별로 신설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면접 요령이랄지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랄지 이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밖에 가서 돈 주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서류전형을 하고 면접을 할 때 재학이다, 졸업이다를 인사 담당자들이 구별하지 않도록 해서 내가 재학생일 때 유리하다 이런 관념을 갖지 않도록 해서 가급적 적기에 졸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김경협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죽 나왔다시피 청년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다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2007년에 7.2%였던 청년실업률이 금년 6월 달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10.3%로 늘어나 있는데요. 그런데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입니다. 20대 청년 니트(NEET)족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청년 니트족?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김경협 위원 못 들어 보셨어요, 혹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많이 들어 봤는데요. 34%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도 다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2% 전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22%요?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니트족, 그러니까 교육도 고용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까지를 포함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의 문제가 비자발적 취업자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건 국제사회에 없는 통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163만 명으로 보

고 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체감실업률을 34.2%, 179만 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 U3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그 미세한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경협 위원 2000년 이후에 최악 수준인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6개월당 1회씩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4년간 청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6조 5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으로 정부가 청년들을, 청년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만든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건 민간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다, 즉 훈련을 시킨다랄지 민간에 의해서……

○김경협 위원 민간이 만들든 노동시장이 만들든 물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청년실업이 심각하면 청년들을 어떻게 하든지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실업대책이 총 아홉 차례나 발표가 됐고 여기에 예산도 6조 5000억씩이나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제가 전체 양질의 일자리 수급 상황도 보고를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 저하, 또 같은 1% 성장을 했을 때도 일자리 창출력의 저하, 그 격차 문제……

○김경협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기재부에서도 고민해야 될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기재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서 청년고용대책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결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부실하다, 부처 간의 협업 및 조정이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기재부인지 고용노동부인지 대통령 직속의 청년위원회인지, 어떤 게 컨트롤타워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청년을 포함해서 일자리사업 전체의 컨트롤타워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부처가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도 저희가 평가하면서……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기관별,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요.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사업 참여 이후에 인턴, 비정규직이 다 한시적인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결과로 놓고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청년고용대책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42.4%가 비정규직이고 여기에 참여한 40.1%가 15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또는 민간에서 스스로 했던 일자리 결과를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비정규직도 30%로 낮고 임금도 훨씬 더 높고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에 참여하면 자발적인 취업인 경우보다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더 많고 더 낮은 임금, 다시 말해서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게 된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소위 상위 10%를 지향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스스로 그 높은 쪽에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

○김경협 위원 좋은 데는 자발적으로 갔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정부 프로그램에 온 친구들은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는……

○김경협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노동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정부정책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예산 사업이랄지 정책사업을 아주 조목조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전통적으로 해 왔던 사업주 위주의 고용보조금 지급 사업 방식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주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낮은 임금 수준을 사업주가 계속 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직접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지적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해서 정규직 전환된 청년들에 대해서 내일채움공제제도라는 걸 해서 2년 동안 근무하면 1200만 원 플러스알파가 저축되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물론 좋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조건도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고 노동부에서 하는 건 좋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지금 청년실업이 대단히 심각하다, 정부도 해야 되고 지자체도 해야 되고 민간도 해야 되고 노동시장도 제대로 가동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다 추진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는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서울시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화된 지원사업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체계화된 정부지원사업을 받지 마라로 유도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인데 청년들이 지금도, 취업준비생의 40%가 공무원, 공기업, 교사, 경찰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당 주고 지원하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면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대한 정부 취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의 채용하고 연계돼 있어서 기업에서 채용했을 때 청년한테 메리트를 주거나 기업한테 메리트를 주는 정책이 연계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작동이 전혀 안 되게 설계돼 있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지원하는 청년들을 다 놓고 서비스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仁和 위원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鄭仁和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맨 뒤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놨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고용의무할당제, 보면 현행 법률보다 퍼센티지를 높였거든요, 그리고 민간에도 적용하는 걸로 하고.

3%를 5%로 높이고 그다음에 민간 고용 규모에 따라서 할당 인원을 늘리는 것,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을 올렸습니다마는 공공 부문에 청년의무할당제를 확대하는 문제는 소위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차원에서 노동개혁이랄지 노동입법이랄지 이런 문제랑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여 주는 근본의 대책이랑 한꺼번에, 패키지로 고민할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간 부문에 적용하는 문제는 사실 법으로 입법화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업종에 있어서 어느 기업은 오늘 문을 닫아야 되고 어느 기업은 더 성장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벨기에에서도 시행을 해 봤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민간 부문은 유도할 수 있는 장치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정책 목표가 있다면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서라도 적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것으로 듣고 다음에 제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개별적으로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우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할당비율 이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4년의 경우 전체 270개 공공기관 중에서 50개, 19%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 조항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2015년의 경우에는 276개 중 24%에 해당하는 66개가 지키지 않았고, 또 지방공기업을 보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鄭仁和 위원 제가 이 통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할당비율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기관이 노동부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鄭仁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팩스 하나 그냥 달랑 보내고 말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의무 채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기관 경영평가, 기재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패널티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이 패널티를 받아야 할 의무비율을 채우지 않은 이런 기관들이 아주 높은 등급을 받고 이런 사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공공기관이 지키도록 더 감독을 강화하고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회의를 기재부하고 여러 가지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들한테도 이 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더 강화해서 지도를 하겠고요. 더더욱 경영평가할 때 청년 의무 준수 및 청년 채용을 많이 한 기관에 대한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임금피크제로 추가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아마 작년의 70%보다 훨씬 높은, 공공기관 준수율이 좀 높아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지금 기재부하고 합동으로 촉구하는 회의도 하고 그런다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실무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담당 임원들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국무위원들께 산하 공공기관장들 회의하고 할 때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특히 청년 채용에 대해서 장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금년에는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이 청년 채용 의무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공공국에서 기재부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일선 지방청에서 관할 공공기관에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지금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의무사항, 페널티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의무적으로 구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보고회를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

성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아니, 법령을 개정할 필요를 못 느끼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법령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정원 조정입니다.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

○鄭仁和 위원 제 얘기는 페널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하고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경영평가 요소에, 법은 아니고 공공기관 관리법 안에 경영평가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법까지는 아니고 그 평가지표를 할 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정리해 주십시오.

○鄭仁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지금 두 장관님께서 12시 20분에 이석을, 특히 교육부장관님께서는 필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섯 분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이현재 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그동안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10년간 정부가 지원한 사업 내용과 연도별 총액, 그리고 일자리가 얼마씩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일인당 지원 이런 내용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기권 장관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고용률이 몇 프로가 목표입니까, 정책 지표에 보면? 대개 어느 정도를 목표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한 10% 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OECD 평균 정도 됩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업무계획 1쪽에 보면 청년고용률이 2000년에 43.4, 중간에 올라간 적이 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겠지만 43.6,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률은……

○이현재 위원 그래서요 지금 정부 정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백화점식이고 보여주기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슨 청년수당 같은 겁니다.

우리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습니까,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직까지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대기업을 왜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근로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현재 위원 근로조건 중의 핵심이 임금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월급 많이 주니까 거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가라 가라 해도 월급 적고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제가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2년 동안 1200만 원 목돈 준다, 대기업 가면 이것 보너스 한 번으로 다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이것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가게 하려면, 또 이렇게 가게 하려면 근본적인 핵심 대책이 뭐냐? 정책의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대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경쟁적으로 청년수당을 준다고 하는 이런 한심한 정책 가지고는 청년을 미스를 한다 이거예요.

대기업 가면 왜 임금 많이 줍니까? 생산성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의 그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사람 없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넘친다고 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대로 실력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전부 좋은 직장만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방편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육부총리도 와 계십니다마는 교육 쪽에서 제대로 키우

도록 하고, 또 노동부는 현장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폭 강화해서 질 높은 청년들이 나오면 왜 취직이 안 됩니까.

대부분 보면 제대로 실력…… 요즘은 영어도 시험 보고 그러면 보통 900, 좋은 기업 가려면 미니멈 800점 이상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교육부와, 노동부는 또 현장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 우리 대기업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몇 프로인지 아시지요? 몇 프로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현재 위원 몇 프로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현재 위원 대체적으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선진국 평균의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성이 선진국의 한 60% 수준 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또 대기업의 절반,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조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 가 보십시오. 얼마나 작업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러면 노동부에서, 또 환경부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해 줘서 생산성을 올리도록 하면서 구조적으로……

사실 청년 일자리는 생산을 통해서 돈을 받는 직장을 만들어 줘야지 정부가 보조금에 의해서 풀어 가는 이러한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무슨 청년수당 준다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한심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엽적으로…… 여기 좋은 말씀은 다 적어 놨어요. 제가 왜 10년 치를 보여 달라고 했느냐면 10년에 들어간 돈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제대로 써 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교육부에…… 교육부도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보니까 중학생·고등학생들한테 기업하고 연결해서 기업의 임원들이 가서 강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TV에서 맨 연예인, 체육 보니까 전부 '뭐 될래' 그러면 연예인 되겠다, 체육 뭐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부에서 대기업이 나가서 강의해 주고 훈련해 주고 현장 보여주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비전, 꿈을 주거든요.

학교 가면, 제가 초등학교에서 매주 교통 안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핸드폰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삼성전자가 만든다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회사라는 걸 견학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저기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질을 높이는 이런 노력, 양은 많으니까 이 양을 해결하려고 청년수당 준다…… 청년수당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현재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기권 장관님 말씀 주시고 이준식 부총리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해야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타협 내용도 그게 핵심이고, 노동개혁도 공정거래나 상생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스매치도 일학습병행제나 청년들의 직업능력 향상 쪽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도……

○위원장 김상희 아, 교육부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죄송합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체험 학습을 통해서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인력 미스매치 관련된 부분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NCS 기반 교과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업과 산학일체형 도

제학교 등을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학습병행제 관련된 것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스매치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추가해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상희 지금 장관님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냥 시간을 좀 아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들 두 분 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을 3분을 드렸습니다. 3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꼭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관석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윤관석입니다.

포털에서 '청년'을 치면 자동완성어가 지금 '실업'이 뜹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열띠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질의나 또 우리 장관님 답변을 아무리 들어 봐도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지원 방안 10일 발표한 것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그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걸 제가 지원대상 및 규모나 지원자 선정방식, 지원액, 지원내용을 다 봐도 사실상 약간의 절차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면 중앙정부가 받아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내면 이것이 나쁜 정책이고 한심한 정책이고, 중앙정부가 하면 좋은 정책이고 훌륭한 정책,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지금 이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갖고 이렇게 정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에 대해서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요. 제가 달라고 해 봤더니 '한 달 내로 만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먼저 서둘러 발표한 것은 서울시 정책 베끼기나 아니면 차단용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실행계획을 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고용노동부라면 청년실업 문제 진짜 심각하니까…… 물론 모든 정책이 정책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는 좋은 정책이 된다고 판단하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년 고용안전망에 대해서는 청년 중심의 안전망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이 졸업한 이후에 취업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조사에 의하면—올해 조사입니다—11.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기 동안, 약 1년 가까이가…… 빨리 한 사람도 있고 1년 넘게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이 한 11.2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이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에 있어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의 문턱…… 지금 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은 지금 현재 실업급여에서 제외 대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윤관석 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주 단위로 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 청년들 중심으로의 안전망에 대한 보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급여에서도 제외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전망, 또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에 한해서 볼 때는 이러다 보니까 열정페이로 악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직을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리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청년희망재단이 만들어질 때 제가 청년희망…… 국가가 고용서비스를 하는 것은 정형화된 일률 서비스를 하는 거다, 그러나 청년 개개인별로는 그 서비스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청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희망재단이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역할 분담을 했고,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그런 수당 문제를 거론했을 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하자……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고용서비스가 우선돼야 되고 기업의 채용과 연계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은 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희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 이번에는 교육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이것이 참 중요한 테마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어기구 위원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교육시스템에서 학생들의 평가를 교과 성적 위주의 평가, 그다음에 대학입시와 연결 이런 것들 때문에 사교육시장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잘 아시는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 가 보면 사교육이 없어요.

아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어기구 위원 유럽에 가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가 봤습니다.

○어기구 위원 유럽 제도,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 가 보면 사교육이 없어요. 공교육에서 100%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못 잡아요, 도대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기구 위원 다른 나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어기구 위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학벌이 바로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용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사교육 없는 나라들을 보면, 유럽을 보면 유럽 나라들은 스펙을 쌓지 않아도,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야말로 능력 중심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교육에 목을 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학벌, 우리는 지금 대학시스템도, 학제도, 그러니까 대학의 서열화 이런 문제를 다 해소하고 일자리도 정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이런 것을 다 없애야 사교육과 공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보고자료를 보면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땜방식,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이것이 이런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영원히 안 풀려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교육이 막 번성하는 것은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 말이지요, 선생님들이 비정규직이 엄청나지요, 기간제 교사들? 이 사람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기간제 교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것부터 뜯어고쳐야 사교육이 하나라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원칙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려면 사교육이 없는 나라, 공교육이 활성화된 나라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벤치마킹.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희 다음 질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지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OECD 청년실천계획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액션플랜.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우리 정부도 지금 이 청년실천계획에 따라서 청년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큰 틀의 방향성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실천계획에 따르면 장관님께서 강조하는 상호의무원칙에 입각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업청년층에 대한 적정 소득 지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경협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서로 병행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번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얘기 나왔을 때 고등어구이가 갑자기 대상이 돼 가지고 한참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청년실업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복 정장이 되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지요.

○김경협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양복 정장 문제보다도 우리 일자리 정책,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 같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그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한해서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혹시 교육급여 수급권자, 지금 시행령에 예고한 대로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자녀 이렇게 있을 경우인데,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70명 이상인 학교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36% 정도 됩니다.

○김경협 위원 48%인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

○김경협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경협 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선행학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까지 포함하면 이게 전체 해당 학교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알아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시 소재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한 38%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48%보다, 절반보다 훨씬 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정확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교육 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상을 넓힌 이유는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 두면 다 하지요.

○위원장 김상희 그러면 다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 장관님들 일정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이현재 위원 아예 가시라고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아니,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신보라 위원님하고 정인화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지금 9분 남았습니다.

○신보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신보라 위원 본 위원이 고용 세습 문제를 조사한 결과가 오늘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올해 6월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체 가운데 3개 대기업에서 여전히 고용 세습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건데요. 성동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는 물론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까지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던데요, 굉장히 경악스러운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채용이나 우선채용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2조를 반드시 위반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시정 노력에는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용 세습과 같은 위법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청년들의 간절한 희망의 씨를 무참히 짓밟고 있고, 공정하고 능력에 맞는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를 분명히 낳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폐단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정부 특별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특단의 조치를 위한 뭔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교섭 과정에서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하고 안 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시정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 하면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강제로 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벌금,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너무 약소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마 당사자들이 따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또 우리 청년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반드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仁和 위원 교육부장관님, 사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교육에 따른 지하경제의 규모 이것이 KD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약 97조 5600여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화된 불·탈법 개인과외가 주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개인과외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도 있는데 개인과외 교습이 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학원 현황을 보니까,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현황을 보니까 지난 5년간 학원 2342개소가 문을 닫았고 교습소 2892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개인과외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3만 1231개소가 신장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보면 약 11만 2000여 개가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11년에 비하면 무려 2만 3800개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개인과외를 하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을 잡아 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규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앞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노동인권에 대한 권리 인식 수준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부산에서 나온 통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 5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적게 받는 대상자가 20.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10대가 31.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희 정리해 주십시오.

○鄭仁和 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노동인권에 대한 권리 인식 수준이 대단히 취약해서, 소위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줄을 모릅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있다는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에 대한 권리 인식을 심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위원장 김상희 정리를 해 주시고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지는 전달이 됐으니까요.

○鄭仁和 위원 이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실태하고 앞으로의 대책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희 지금 장관님들 일정 때문에 제가 너무 서둘러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이신데요, 이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교육부총리는 바쁘시면, 저는 질문 없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괜찮습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됩니다.

○이현재 위원 이기권 장관님,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할 수 없는지……

맞춤형, 청년이라고 그래서 다 그냥 패키지로 세제, 뭐뭐뭐 하는데 예를 들면 '대학 졸업생, 인문과 공과 계통에는 이런이런 단계에서 지원이 있다' 해 가지고 맞춤형을, 또 고졸에는 인문고·전문고라든지 학교를 안 간 청년, 이런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아, 나는 여기로 가서…… 그게

학력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취직할 때는 이것이 있고 들어가서는 이런 세제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는 또 이러한, 아까 체험해서 목돈 마련도 되고 해서 이렇게 크리티컬(critical) 맞춤형으로……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전부 공급자 위주입니다. 전부 공무원 위주로 해 놓으니까 청년들이 봐도 이게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가지고 수요자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청년채용 의무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실력과 관계없이 비율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이 어느 기업에 들어가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퇴출되든지 회사에서 그냥 허드렛일 하다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항구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비율과 동시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실력 요건을 뭔가를 좀 이렇게……

요즘 뭐라 그러면 전부 규제, 규제 하는데 회사나 공기업도 쓰면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 바로는 아니더라도 5년, 10년 후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를 무리하게 넣어 놓으면 그 사람이 중간에 나오면 정말로 갈데없는 낭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무비율과 동시에 자격 요건도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청년수당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청년수당 또 고용부 구직실비지원제도의 차이점을 좀 명쾌하게…… 아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서울시는 그냥 청년들 돈 주는 거고, 정부에서 하는 거는 취업을 전제로 가는 길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저희가 청년들에게 고졸이든 대졸이든 한 달 동안 본인의 희망을 전제로 개인별로 진로지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체험과 관련된 문제는 자격보다는 그 과정에 내가 어디를 정하면 그것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내도록 하고 있고요. 서울시 문제는 저희가 차분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서울시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모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어기구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8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과 노력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부족했고, 여전히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위 활동 방안으로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향후 특위 운영 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그리고 제시된 대안을 청년 일자리 해소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반영하셔서 서민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경협 김상희 김성찬 김승희
김현아 박완수 신보라 심상정
어기구 윤관석 윤상직 이현재
이 훈 전재수 정유섭 정인화
천정배

○청가 위원(1인)

제윤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 요 환
전문위원	박 용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 준 식
기획조정실장	이 기 봉
학교정책실장	김 동 원
학교정책관	신 익 현
교육과정정책관	박 제 윤
학생복지정책관	오 승 걸
평생직업교육국장	홍 민 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고용정책실장	문 기 섭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 영 돈